

일-가정 균형을 위한 보육 및 학교 영역에서의 요구도와

정책: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Need and Related Policy for Work-Family Balance in the Area of Educare and School: Focused on the Dual Worker Families

서원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조영희**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Dept. of Living Welfare, Seowon Univ.

Professor: Cho, Young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목 차〉

- | | |
|-----------------------|---------------|
| I. 들어가기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정책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needs for the balance of work-family and to provide the related policies for dual worker family. We focused on the life area of educare and school. Data were collected from 197 working mothers who have 1 or more children under age 10. The findings were: 1) after-school programs, holidays on every alternate Saturday, arbitrary no school days were not appropriate to the working parents' everyday life patterns, so the paradigm and practical conditions should be adapted to the needs of working parents. 2) the most working parents depended on the kindergarden, but the parents' satisfaction with the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 주저자: 조영희 (choyh@seowon.ac.kr)

*** 교신저자: 송혜림 (sangwoosong@hanmail.net)

quality of service, time duration, the human resource of educare teacher was not sufficient, so these issues should be discussed more profoundly.

Key Words : 일-가족 균형 정책(policy for work-family balance), 맞벌이 가정(dual-worker families)

I. 들어가기

2007년도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54.8%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이는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현상과 함께 가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개별가정의 기능에도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개별가정의 돌봄제공 자원이 감소됨으로써 돌봄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가족주의에 기반한 돌봄노동체계의 개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시점이다. 즉 가족구성원 돌봄을 사회보다는 가족이, 가족 안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수행하는 체제가 계속 유지될 때, 미시적으로는 기혼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의 문제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여성의 생애노동주기에서의 중단과 단절로 인하여 여성의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생애노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갖는 가족과 돌봄에 대한 부담, 이로 인한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취업 여성들이 극단적 선택, 즉 가족을 위해서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고 그 균형을 취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은 가정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는 평등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성별 역할분담으로부터 평등한 역할분

담으로의 변화는 인식과 실태의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하며, 특히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밖 즉 사회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족이, 특히 여성이 갖는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방향에서의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맞벌이 가정의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 중에서도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가정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최근 가족원에 대한 돌봄노동을 경감시키고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 및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균형과 관련하여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1차 중장기보육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포괄적인 가정정책 영역 중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된 제도들을 보면, 대부분은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보육정책과의 연계성이 큰 반면, 초등학교 이후의 시기는 정책의 사각지대로 평가되어 왔다(송혜림 외, 2007). 따라서 현재 영유아 대상 보육정책은 이미 맞벌이 부모 모델로 전환하여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학교는

여전히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학교-가정 연계 운영방식을 유지하며 맞벌이 학부모 모델로 전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송혜림 외, 2008).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는 돌봄보다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 특성상 여전히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이 크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모임, 재량휴일, 방과후 학교, 토요일휴일 등의 운영에 있어 여전히 자녀돌봄과 학교활동 참여를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하지 않고 대기 중인 어머니를 전제로 하는 제도 운영으로 인해 취업 학부모의 일정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이 드러났다. 특히, 현행 학교제도는 어머니의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기혼 취업여성이 갖는 취업과 자녀돌봄의 이중부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송혜림 외, 2008).

결국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대상을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여 실제적인 정책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자녀돌봄의 부담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영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이들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보육 및 학교 영역에 대해 갖고 있는 요구도를 조사·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보육 및 학교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사회적 환경 마련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정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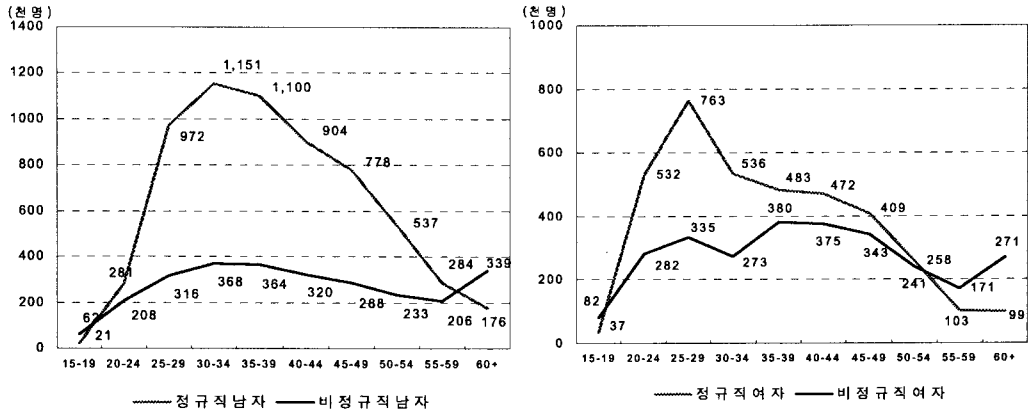
1. 선행 연구 고찰

취업여성의 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의 이용 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한 선행 연구(유아랑, 2009)에 의하면 대부분의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의 부담으로 인하여 여가생활이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양육에서 발생한다는 것, 남편의 부담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시간대의 틈새가 발생하여 문제를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아직까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취업의 현황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여성의 생애노동주기가 전형적인 M자형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 정규직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감소하지만 비정규직은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을 정점으로 하고 30대 초반을 저점으로 하는 M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30대 초반에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기인한다(노동부 홈페이지).

이처럼 여성의 취업률 자체는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의 내용과 질, 예컨대 안정성, 월급, 지속성 등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림 1) 정규직/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령별 취업 현황



자료: 『2006.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여성 취업의 동기 역시 단순한 가계 보조나 소득 증대에서 나아가 사회 참여, 여가 활용, 자아실현 등으로 다양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볼 때, 생애 지속적인 노동에 대한 여성의 요구는 더욱 상승할 것이 예측된다.

그런데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육아부담이라는 점에 미루어, 자녀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가장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여성취업 장애요인

사유/연도	'98년	'06년
육아부담	29.3%	45.9%
사회적 편견과 관행	28.2%	18.5%
불평등한 근로여건	12.5%	11.6%
능력부족	14.3%	5.9%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각 년도

한편, 최근 장기화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구조 조정의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먼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 여성 취업 50%를 상회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성은 '가장 늦게 고용되고 가장 먼저 해고되는'

산업예비군으로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여성 취업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송혜림, 2009). 그러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여성 취업의 안정성,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포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여성-가정, 남성-사회 라는 이분법적 역할 구조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 제도와 정책의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이들 가정의 부모역할에 대한 접근도 동시에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이 경험하는 부모역할 수행에서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 이라는 인식 속에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 (박정운 외, 2008). 보육 및 학교 영역에서는, 저학년생 급식이나 환경 미화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관행, 주 5일제 근무가 완벽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격주 토요일 휴업일 제도,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대안 없이 이루어지는 단기 방학과 효도 방학, 오후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는 대부분의 방과후학교,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이

나 학부모모임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취업한 엄마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조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송혜림 외, 2008).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 특히 영유아기 및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주목할 때, 사회 전반에 걸쳐 맞벌이 가정을 보편형으로 인정하는 문화의 정착,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들의 현실화, 보육시설/학교/기업/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연계와 소통의 체계가 요구된다. 결국 일-가정 균형은 제도적 장치 뿐 아니라, 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정영금, 2007), 실태와 인식 및 제도 간의 불일치를 종식시켜야 가능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에 주목하여 가정의 돌봄기능을 지지·보충·대체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선행연구(송혜림 외, 2009)에서 조사한 바, 이미 관 주도의 제도적 체계를 통해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가족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 단체와 기관에서도 가정의 돌봄기능을 보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간 연계, 효과성의 분석 등이 미흡하며 서비스의 중복 혹은 누락의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가족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돌봄서비스는 유아나 노인들에 편중되어 있으며, 학령기 가족인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나 중고등학생을 둔 가정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서비스 간 균형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최근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일과 가족의 양립의 연구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제도를 중심으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적인 연구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기업의 제도적 개선과 분위기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가정의 돌봄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돌봄노동제공자에 부담이 가중되고, 돌봄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관련 정책 분석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저출산고령화 정책 역시 많은 부분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저출산 고령화 정책

먼저 가정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양육 부담의 감소, 일-가정 양립 등의 정책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¹⁾. 즉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중,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아젠다 속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하나의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 중 출산과 양

1) 이하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인용 (2008년 10월 방문)

〈표 2〉 OECD 국가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분담 현황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한국
보육비/GDP	1.67	0.80	0.30	0.39	0.55	0.55	0.31	0.35	0.27
정부 분담율	88	73	66	97	91	78	78	70	32

자료: 송다영(2008)에서 재인용

육의 부담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하에,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사회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환경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6 - 손주영, 2008 재인용).

2) 보육정책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시작된 보육 정책은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2002년 이후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직면한 정부는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보육부문을 중요한 정책분야로 성장시켰다(송다영, 2008).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보육 현실은 민간의 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아동의 돌봄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이것은 정부 및 보육관련시설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수요자 사이에 분명히 어떤 간극이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이런 부분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최근 들어 보육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보면(<표 2> 참조), 상당히 낮은 재정지원이어서 공보육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원의 투자가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보육정책의 한계는 영유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 자녀돌봄과 관련되어 직면하고 있는 부담, 또 이 부담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일상적 문제 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가족정책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력하는 가족정책 역점 추진과제 중 가족돌봄통합지원망 구축(돌봄서비스의 가족단위 통합체계 구축, 지역 양육망 구축 등)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지원(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남성의 아동양육 참여 활성화 등) 등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부담을 완화시키고 일-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방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생애전환 시기별 시민 가족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가족정보 통합 제공 (가칭) 「e-family」 구축(생애주기별 교육 및 정보제공: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정법률 등, 가족관련 상담, 가족유형별 서비스: 맞벌이 가족, 이혼가족, 조손가족 등), 보육제도의 틈새를 보완하고, 일하는 엄마 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아이돌보미사업 등도 일-가정 양립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4) 고용정책-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한편 노동부에서도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 남녀고용평등법의 명칭이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시행 중인데, 여기에서는 육아휴직 사용기한의 연장, 단축근무 허용, 배우자출산휴가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관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령 제정 업무 (휴가·휴직 및 근로시간 및 형태 다양화), 육아휴직 및 급여·장려금제도 운영·개선,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급여 포함), 직장 보육지원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추진하는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의 방향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가정과 조화되는 근로환경 등 다양한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 홈페이지).

여성부의 경우에도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복지 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 일정 기간 노동을 중단하는 여성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육 및 방과후학습 지원의 서비스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의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승진·보수·직책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 편의시설 설치(수유실 등) 근무환경 개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여성친화지수 개발 등도 계획·추진 중이다 (여성부 홈페이지).

5) 교육정책- '방과후학교'

앞에서도 보았듯이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육아부담으로 나타나

면서 정책의 초점도 학령기 이전의 어린 아동의 돌봄 문제에 맞추어 왔다. 그러나 초등학교 아동, 특히 어린 저학년 경우의 돌봄 문제도 일하는 여성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동시에 아동으로서도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해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나타난 정책이 바로 '방과후 보육(after school care)'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는 여성 가정(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교 아동 돌봄은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보육으로 시작되었다. 방과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종래의 학교교육에 '보호(caring)'의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맞벌이 부부, 핵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 많아짐에 따라 방과후에 부모가 올 때까지 또는 필요한 시간 동안(주중, 주말, 방학 중) 교육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생김으로써 도입되었다(김홍원, 2008). 현재 초등 보육교실은 저학년을 위주로 운영하며,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정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실시되고 있다(양애경, 2008).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 보육교실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낙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보육교실이 일반 아동들에게도 이용됨으로써 이런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다(김홍원, 2008).

III.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위해 보육 및 학교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

2) 아래 내용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2008년 10월 방문)

다. 또한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는 특히 속해 있는 직장의 규모와 특성, 취업 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 취업변수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며 정규적 출퇴근을 하는 상근근로자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8월-9월 사이에 총 220부를 설문하였으며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부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응답자 만 연령, 학력,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 연령(첫~셋째자녀), 거주지(시, 도/구, 군))와 직업특성(근무회사명, 직급, 출퇴근 왕복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직장규모, 근무년수, 업무특성, 휴가시 대체인력 상태, 지난해 유급 휴가 사용일수, 주 40시간 근무 실시 여부)을 기본으로 하고,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보육 및 학교 영역에 대한 요구도 파악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연구회의를 통해 학부모 모임 관련(횟수, 필요성, 참여, 자녀에의 불이익, 요구 등 6문항), 방과후 교실 관련(이용여부, 종류, 불만, 개선사항 등 5문항), 단기방학, 학교재량 휴업일 관련(문제, 개선사항 등 2문항), 보육시설 이용 관련(도움정도, 개선사항, 부담 등 5문항), 정책 요구(정책 우선순위, 바우처 의견 등 2문항) 등과 같은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일-가정생활 균형도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Program 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결과를 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7)

문항	범주	N(%)	M(SD)
연령(만)	30세 미만	8(4.1)	35.2세(3.6세)
	30-35세 미만	80(40.6)	
	35-40세 미만	83(42.1)	
	40세 이상	26(13.2)	
학력	고졸이하	36(18.3)	-
	전문대졸	40(20.3)	
	4년제 졸	73(37.1)	
	대학원 이상	47(23.9)	
	기타	1(0.5)	
월평균 가계소득	400만원 미만	24(12.2)	616.7만원 (265.2만원)
	400-600만원 미만	67(34.0)	
	600-800만원 미만	43(21.8)	
	800만원 이상	46(23.4)	
	삭제 및 무응답 ¹⁾	17(8.6)	
첫째자녀 연령(만)	3세 미만	28(14.2)	6.7세(3.5세)
	3-6세 미만	47(23.9)	
	6-9세 미만	58(29.4)	
	9세 이상	64(32.5)	
둘째자녀 연령(만)	3세 미만	26(13.2)	4.9세(3.0세)
	3-6세 미만	50(25.4)	
	6-9세 미만	32(16.2)	
	9세 이상	11(5.6)	
	해당사항 없음 ²⁾	78(39.6)	
셋째자녀 연령(만)	3세 미만	5(2.5)	3.0세(2.0세)
	3-6세 미만	4(2.0)	
	6-9세 미만	1(0.5)	
	9세 이상	0(0.0)	
	해당사항 없음 ³⁾	187(94.9)	
총 자녀수	1명	78(39.6)	1.7명(0.6명)
	2명	109(55.3)	
	3명	10(5.1)	
거주지	서울	89(45.2)	-
	경기, 인천	108(54.8)	
합계		197(100.0)	-

주: 1) 월평균 가계소득이 200만원 미만(N=2), 2000만원 초과(N=6)인 응답자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어 결측으로 처리함.

2) 자녀가 1명인 경우(N=78)에는 해당사항 없음.

3) 자녀가 2명인 경우(N=109)에는 해당사항 없음.

〈표 4〉 조사대상자의 직업 특성 (N=197)

문항	범주	N(%)	M(SD)
출퇴근을 위한 왕복시간	60분 미만	70(35.5)	78.9분 (54.0분)
	60-120분 미만	86(43.7)	
	120분 이상	41(20.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57(28.9)	2,882분 (493.8분)
	41-50시간 이하	94(47.7)	
	50시간 초과	46(23.4)	
직장규모	소기업(50명 미만)	63(32.0)	4,196.7명 (13,975.1명)
	중소기업(50-300명 미만)	52(26.4)	
	대기업(300명 이상)	66(33.5)	
	무응답	16(8.1)	
근무연수	3년 미만	49(24.9)	80.7개월 (57.5개월)
	3-6년 미만	40(20.3)	
	6-9년 미만	26(13.2)	
	9년 이상	81(41.1)	
	무응답	1(0.5)	
업무특성	근무시간에만 집중	110(55.8)	-
	퇴근 후, 휴일, 직장에 남아 처리	52(26.4)	
	직장, 집에서 연장	29(14.7)	
	기타	6(3.0)	
휴가 시 대체인력 존재상태	동료들이 나눔	130(66.0)	-
	새로운 인력 투입	20(10.2)	
	대체인력 없음	39(19.8)	
	기타	8(4.1)	
지난해 유급휴가 사용일수	7일 미만	62(31.5)	9.4일(6.2일)
	7-14일 미만	82(41.6)	
	14일 이상	40(20.3)	
	삭제 및 무응답 ¹⁾	13(6.6)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여부	매주 실시	148(75.1)	-
	격주 실시	23(11.7)	
	실시하지 않음	19(9.6)	
	기타	7(3.6)	
합계		197(100.0)	-

주: 1) 출산휴가(N=3)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 판단되어 결측으로 처리함.

총 197명의 응답자 평균 연령은 35.2세이며, 학력은 대학 졸업 > 대학원 이상 > 전문대 졸업 > 고졸 이하의 순으로 나왔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616.7만원으로, 맞벌이 가정 중에서도 여성이 정규직에 근무하는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첫 자녀 평균 연령은 만 6.7세, 둘째 자녀 평균 연령은 만 4.9세로 나왔다. 총 자녀 수는 1.7명이다.

2. 조사대상자의 직업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인 기혼취업여성의 직업 관련 특성은 아래 <표 4>와 같다.

먼저, 출근과 퇴근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78.9분이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882분, 즉 주당 평균 48시간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특성으로는 근무시간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대상자가 절반이 넘고, 휴가 시 본인이 하던 업무는 동료들이 나누어 한다는 응답이 66%이다. 지난 해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9.4일이며, 다니는 직장의 75%가 매주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3. 조사대상자의 일-가정 균형도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일-가정 균형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가정 균형도 (N=197)

문항	범주	N(%)	M(SD)
일-가정 균형 정도	매우 불균형	20(10.2)	2.7(0.9)1)
	불균형	64(32.5)	
	보통	73(37.1)	
	균형	30(15.2)	
	매우 균형	4(2.0)	
	무응답	6(3.0)	
합계		197(100.0)	-

주: 1)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 매우 불균형~5점: 매우 균형”임.

조사대상자들은 일-가정 균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불균형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불균형하다는 응답이 균형적이라는 응답보다 더 많다.

4. 보육 및 학교 영역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

1) 학교 영역

(1) 학부모 모임에 대한 의견

평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나 총회, 운영위원회 등과 같은 학부모모임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었다.

아래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학부모모임 횟수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 모임의 필요성 역시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모임 참여에 있어서는 어려운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모임의 횟수 자체는 적절하나 일하는 부모가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 모임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표 6〉 학부모 모임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학부모 모임횟수	너무 많음	7	6.1	학부모 모임 참여	수월한편	21	18.1
	많은 편	22	19.1		어려운편	76	65.5
	적절함	63	54.8		불가능	19	16.4
	전혀 없음	23	20.0		계	116	100.0
	계	115	100.0				
학부모 모임 필요성	정말 필요함	6	5.1	학부모 모임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불이익 큼	8	7.0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70	59.8		불이익 있는 편	52	45.6
	그다지 필요 없음	33	28.2		별로 많지 않음	53	46.5
	전혀 필요 없음	8	6.8		전혀 없음	1	0.9
	계	117	100.0		계	114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학부모 모임 개선 방안	부모가 학교 가는 일이 줄어들어야 함			54		46.6	
	직장에서 부모에게 시간을 주어야 함			58		50.0	
	기타			4		3.4	
	계			116		100.0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불이익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도 ‘별로 많지 않음’의 응답과 함께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런 점으로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 역할 수행이 시간적·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부모 모임의 개선 방안으로, 직장에서 부모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 학부모모임 참여를 수월하게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학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 자체가 줄어들어서 맞벌이, 홀벌이 가정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더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이 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정 일하는 엄마 아빠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고 이로써 일-가정 균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대안, 즉 일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보편적으로 학부모가 학교에 참여하거나 동원되는 모임과 행사 자체를 줄여 맞벌이-홀벌이 가족 간 차이를 경감시키는 방법이 병행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학부모 모임 자체를 맞벌이 가정의 시간에 맞추어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학부모 동원에 대한 의견

저학년 점심 배식이나 환경미화, 간식준비, 교통정리 등과 같은 일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현상에 대한 대상자들의 응답은 아래 <표 7>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점심배식시간에 동원되는 경험은 있다는 경우와 없다는 경우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필요성에 대해

<표 7> 학부모 동원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점심배식 동원	경험 여부	예	54	48.6	간식준비 동원	경험 여부	예	54	48.2		
		아니오	57	51.4			아니오	58	51.8		
		계	111	100.0			계	112	100.0		
	필요성	예	38	34.9		필요성	예	41	37.3		
		아니오	71	65.1			아니오	69	62.7		
		계	109	100.0			계	110	100.0		
	불만 여부	예	50	49.5		불만 여부	예	46	43.4		
		아니오	51	50.5			아니오	60	56.6		
		계	101	100.0			계	106	100.0		
	환경미화 동원	경험 여부	예	39		34.8	교통정리 동원	경험 여부	예	38	34.5
			아니오	73		65.2			아니오	72	65.5
			계	112		100.0			계	110	100.0
필요성		예	33	30.3	필요성	예		70	64.2		
		아니오	76	69.7		아니오		39	35.8		
		계	109	100.0		계		109	100.0		
불만 여부		예	53	52.0	불만 여부	예		28	27.5		
		아니오	49	48.0		아니오		74	72.5		
		계	102	100.0		계		102	100.0		

서는 없다는 응답이 훨씬 많다. 그러나 불만여부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점심배식에 학부모가 동원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훨씬 많지만, 실제로는 절반 정도가 동원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환경미화에의 동원의 경우에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점심배식과 마찬가지로 훨씬 많으나, 실제 경험여부에서는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불만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간식준비를 위한 동원은 점심배식을 위한 동원과 비율은 다소 다르나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교통정리 동원은 다른 영역에서의 응답과는 달리,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나 실제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불만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학부모 동원에 대한 응답을 종합하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이러한 영역에서 동원을 경험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불만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심배식, 환경미화, 간식준비를 위한 학부모 동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교통정리를 위한 동원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그 내용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방과후학교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자들의 방과후학교 이용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는 44%,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56%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방과후학교 이용률은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39.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일하는 여성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가능성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특기적성교실을 이용하며, 종일반 보육교실 이용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³⁾, 특기적성교실 이용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이용을 통해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불만요인을 조사한 결과, 그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 2순위로는 시간이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방과후학교 운영의 개선점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응답은 프로그램 활성화이며, 그 다음이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 숙제지도나 학습적인 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록 낮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러나 현재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대부분 이른 오후 시간에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또다시 이 시간을 위해 각자의 프로그램을 짜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아직까지는 학교의 방과후학교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보완이나 대체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현재 초등학교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부족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교실 수는 '1반' 운영이 8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교실 한 반의 평균 인원 수는 16~20명 42.98%, 21~25명 34.7%, 11~15명 16.3% 이다(김홍원, 2008).

4) 현재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으나 문제는 대부분 이른 오후 시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때문에 아동들은 또다시 이 여분 시간을 위해 각자의 프로그램을 짜야만 한다(백인숙, 2008).

〈표 8〉 방과후학교 이용여부와 의견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방과후 학교이용 여부	이용함	49	43.75	방과후 학교불만2순위	내용이 부실(프로그램)	1	4.5
	이용하지 않음	63	56.25		시간이 적절치 않음	13	59.1
					강사수준이 낮음	2	9.1
					시설, 환경이 열악	6	27.3
	계	112	100.0	계	22	100.0	
방과후 학교유형	특기적성교육	47	95.9	방과후 학교 불만 3순위	강사수준이 낮음	3	50.0
	종일반보육교실	2	4.1		시설,환경이 열악	3	50.0
	계	49	100.0		계	6	100.0
방과후 학교 도움정도	큰 도움이 됨	6	12.2	방과후 학교 불만 4순위	시설, 환경이 열악	2	100.0
	도움이 되는 편	29	59.2				
	도움이 크지 않음	12	24.5				
	전혀도움이 안됨	2	4.1				
	계	49	100.0		계	2	100.0
방과후 학교불만1순위	비용부담이 큼	2	4.2	방과후 학교 개선점	종일반운영의 활성화	12	25.5
	내용이 부실(프로그램)	32	66.6		숙제지도, 학습적인 내용보완	11	23.4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7	14.6		건강·영양에 대한 배려	1	2.1
	강사수준이 낮음	4	8.3		저렴한 가격	1	2.1
	시설, 환경이 열악	3	6.3		생활지도	1	2.1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성화	18	38.3
					방학중 운영	3	6.4
	계	48	100.0		계	47	100.0

이는 종일반 보육교실보다 특기적성교실의 이용이 훨씬 높다는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를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 비추어, 불만요인의 개선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위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기간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보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일반 보육교실을 더 많이 확충·운영과 함께, 일상적인

〈표 9〉 단기방학 등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단기방학 등 문제	늘 발생	15	13.2	단기방학 등 개선점	가능한 줄임	24	22.0
	발생하는 편	35	30.7		아이 돌봄 프로그램 활성화	48	44.0
	그럭저럭 해결	53	46.5		대처 계획 위한 학기초 공지	34	31.2
	전혀 문제없음	11	9.7		기타	3	2.8
	계	114	100.0		계	109	100.0

돌봄 외에 학습지도 면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4월(2009년) 정부에서는 사교육 경감과 함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의 확대 실시를 공표한 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투입하며, 아동의 연령별·발달별로 요구되는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단기방학에 대한 의견

최근 일선 학교현장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방학(학교장 재량 휴업일 포함)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먼저, 단기방학 등으로 인한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아직까지는 단기방학으로 인하여 큰 문제를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기방학의 개선점으로는 이 기간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단기방학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기초에 미리 그 일정을 공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현재 단기방학 뿐 아니라 휴일을 전후

로 운영되는 재량휴업일 등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 시간이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 등의 경우 이를 미리 공지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을 대신하여 이 기간에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 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육시설 영역

다음으로 보육시설 영역에 대한 견해 및 요구도를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먼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조사대상자 중,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자녀돌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결정적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76.5%로 나타나, 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맞벌이 가족의 자녀돌봄에 도움이 되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이용이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보육시설이 맞벌이 가족에게 있어 자녀돌봄을 위한 절대적인 방안임

〈표 10〉 보육시설 영역 이용 실태 및 요구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보육시설 영향	결정적인 도움	69	40.6	보육시설로 인한 양립정도	매우충분	3	1.9
	도움이 되는편	61	35.9		충분한편	48	30.8
	큰도움이 되지 않음	27	15.9		불충분한편	87	55.8
	전혀 도움이 안됨	13	7.6		매우불충분한편	18	11.5
	계	170	100.0		계	156	100.0
보육시설 개선점	보육시간의 연장	29	17.8	시설 외 필요서비스	틈새 서비스	14	12.6
	보육료 하강	17	10.4		대체인력	20	18.0
	융통적인보육시 간운영	62	38.0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	45	40.5
	보육교사질향상	45	27.6		돈, 경제력 지원	7	6.3
	보육시설과 부모간의 의사소통활성화	10	6.1		기타	25	22.5
	계	163	100.0		계	111	100.0
보육시설회 의 경험여부	예	78	53.8	보육시설부 모교육경험	예	67	46.5
	아니오	67	46.2		아니오	77	53.5
	계	145	100.0		계	144	100.0
보육시설회 의부담	예	56	40.9	보육시설부 모교육부담	예	58	42.3
	아니오	81	59.1		아니오	79	57.7
	계	137	100.0		계	137	100.0
보육시설회 의 필요성	예	98	70.0	보육시설 부모교육 필요성	예	100	71.4
	아니오	42	30.0		아니오	40	28.6
	계	140	100.0		계	140	100.0

에는 확실하지만, 일하는 엄마와 아빠의 일-가정 균형에 충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는 융통적인 보육시간 운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아, 맞벌이 가족이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실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육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의 자

녀돌봄을 위해 보육시설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체인력, 틈새서비스 등이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민

〈표 11〉 보육 관련 정책 요구도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보육정책중 요한것	보육시설 국공립전환		24	13.0	부모에 보육료 지원	현재대로 보육시설에 지급	41	22.3	
	보육료 부담의 경감		41	22.3		이용자에 지급	143	77.7	
	보육서비스 질향상		96	52.2	계		184	100.0	
	표준화 된 교육 프로그램		14	7.6					
	보육시설 평가		7	3.8					
	기타		2	1.1					
	계		184	100.0					

고 말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수급 운영, 보육시설이 포괄할 수 없는 시간과 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는 서비스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부모참여회의나 부모교육에 대한 의견으로, 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 그리고 회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이로 인한 부담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이 더 높았다. 특히 회의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부정적 응답보다 매우 높아, 부모들이 보육시설에서의 부모참여회의를 많이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요구도가 나타났으나, 부모교육의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더 많고 부모교육으로 인한 부담은 있다는 경우보다 없다는 경우가 더 많아, 앞으로 부모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유용한 대안이 되면서도, 실제 일-가정 균형을 위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육시간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 외에 다양한 기관 설립 및 효과적 운영, 대체인력 제공, 틈새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적 대안도 심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도를 보면 <표 11>과 같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나타났고, 다른 내용보다 이에 대한 요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함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 정부가 시설에 지불하던 보육료 지원을 시설이 아닌 이용자(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비율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돌봄 관련 바우처제도를 수요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서, 향후 보육정책 추진의 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실제 학부모모임에의 참여는 어려운 편이라고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장에서의 시간적 지원과 동시에 학부모 모임 등의 기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흔히 아동 엄마들의 학교 참여의 대표적 영역인 점심 배식이나 환경미화, 간식 준비, 교통정리 등과 같은 일에 학부모 동원에 본 조사대상의 경우는 동원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그에 대한 불만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이용률은 44%로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참여율(39.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특기적성교실을 이용하고 있고, 종일반 보육교실 이용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방과후 학교 이용을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종일반(보육교실) 운영의 활성화가 개선안으로 제시되었다. 동시에 믿음을 주는 보육교실 운영을 위해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방학(학교장재량휴업일 포함)으로 그때마다 문제를 겪는다는 가정이 44%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방과후 학교와는 달리 보육시설이 일-가정 균형을 위해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가정 균형에 충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육시간의 운영, 다양한 기관 및 서비스,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자질 향상 등이 요구되어 졌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육

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해 이용자(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선 학교의 운영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 지원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관련해서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단기방학 실행, 방과후 학교의 단편적인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이 실제 맞벌이 가정의 일상과 괴리되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맞벌이 가정의 생활상의 문제, 시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육시설의 경우는 일-가정 균형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부모의 일하는 시간 측면에서 본 보육시간의 문제, 비싼 보육료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 서비스 수요자 가정의 다양한 특성 및 욕구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도출되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 대부분이 보육시설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 시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틈새보육 지원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학령 전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령 전 자녀를 둔 부모는 돌봄에 대한 요구가 더 크며, 학령기 자녀의 부모는 학습과 교육, 예컨대 숙제 지도, 보충학습 등에 대한 요구와 기초적인 돌봄에 대한 요구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정책은 물론 교육정책 또한 기본적으로 일-가정 균형의 시각에서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육 및 교육정책 입안자, 교육 행정가, 교사 등 관련자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관련부처의 홍보 및 교육, 지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영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아래와 같다. 먼저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 및 별도의 학교 내 담당 부서 조직, 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시간 연장,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현황조사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동시에 정책의 취지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기방학, 학교장재량휴일, 격주토요일휴업일,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에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며, 또한 부모의 귀가시간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재 방학중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맞벌이 부부의 생활실태를 반영한 것이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채용 등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 대비 효과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보육을 위해 보육 교실 확보 및 보육과 학습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초등 보육교실의 경우 보육교사 혹은 학교 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교교사나 보육교사에게 보호와 교육에 일정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사전에 필요한 연수교육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 모임 등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해 그 방법과 시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학교에 오지 못하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학교·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학교 참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육 영역에서는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낮은 보수와 과다 근무시간 등으로(조영희, 2006) 이직 혹은 직장 포기 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근무 연한이 짧은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의 부모들은 신뢰를 하지 못 한다는 점이다. 우선 보육교사의 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보수·연수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노력도 적극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부모의 다양한 근무시간 방식과 관련하여 보육시간의 다양화,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공보육화는 지속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육시설의 국공립화를 통해 보육료를 낮추는 문제와 함께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육 바우처 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제고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 2) 김창석(2008). 방과후 보육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63-90.
- 3) 김홍원(2008). 2007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4) 노동부. www.molab.go.kr.
- 5) 박정윤 외(2008).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지원 연구 자료집. 1-90.
- 6)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 7) 손주영(2008).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정책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3), 81-101.
- 8) 송다영(2008).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략.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3-70.
- 9) 송혜림 외(2007). 참여정부의 가정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가정정책 발전방안.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특별위원회 정책대토론회 자료집. 1-80.
- 10) 송혜림, 서지원(2008). 취업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의 ‘일-가정 균형’ 제도 현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91-207.
- 11) 송혜림(2009). 경제 위기와 가정: 가정의 일상, 우리의 대안. (사)가전모 제 1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1-43.
- 12) 송혜림 외(2009). 가족돌보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사)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 지원 연구 자료집. 1-110.
- 13) 양애경(2008). 새 정부의 「방과후학교 지원정책과 방향」,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3-112.
- 14) 여성부. www.moge.go.kr.
- 15) 유아량(2009).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방안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연구 - 취업여성의 유아기 자녀 양육지원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16) 정연희(2008). 새정부의 방과후 보육 지원정책과 방향.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9-62.
- 17) 정영금(2007).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일-가정 균형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 12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24.
- 18) 조영희(2006). 청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보육여성 분야. 306-359.

- 투 고 일 : 2009년 4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4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5월 19일